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기본소득’ 관련 정책 II

헤드라인뉴스 새 국정과제 ‘공동부유’와 결합되어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 가능성

사회·복지 현재 ‘최저생활보장제도’ 강화 시행...향후 ‘기본소득’ 고려 전망

사회·복지

‘부분 기본소득’ 지원 시범 프로그램 시행 발표
저(低)연금자에게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기본연금법’ 시행
‘보편적 기본소득’ 관련 실험과 논쟁 지속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샌디에이고	김민희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박효택		홍남명
시카고	강기향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올랜도	박혜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워싱턴 D.C.	이정근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하와이	임지연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휴스턴	이경선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토론토	고한나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새 국정과제 ‘공동부유’와 결합되어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 가능성

중국 / 사회·복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출범과 활동에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시작. 기본소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새 국정과제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결합되어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있음

중국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배경 및 현황

-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연구한 단체는 1986년 유럽에서 출범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 2004년에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름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변경
 -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과 더불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중국에서 기본소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베이징(北京)사범대학교 중국소득분배연구원(中國收入分配研究院, China Institute for Income Distribution)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2011년에 출범했는데 소득분배, 빈곤과 노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중
 - 5개 센터 중 기본소득 연구는 ‘임금과 소득분배연구센터’(工資與收入分配研究中心)가 전담
 - 임금과 소득분배연구센터는 1988년부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의뢰를 받아 진행해 온 중국가정소득조사(China Household Income Projects) 연구팀이 전신(前身)이라서, 중국에서 가구수입과 소득분배에 관한 조사자료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축적한 기관임
 - 이 연구원은 2020년 1월 <이념에서 실천까지: 기본소득 연구발전(從理念到實踐：全民基本收入研究發展)>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기본소득의 정의와 개념, 사회적 가치, ▶기본소득 연구 동향, ▶해외의 기본소득 실천 사례, ▶중국에서의 기본소득 적용 문제 등을 고찰

-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소개한 첫 보고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관련 설문조사 내용

- 2020년 봄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UNDP 베이징대표처와 공동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설문조사의 목적은 주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연령별 및 직업별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향후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하기 위함임
 - 베이징시, 상하이(上海)시, 충칭(重慶)시와 더불어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톈진(天津)시의 800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
 - 중국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기본소득의 정의와 개념을 소개하는 과정을 거침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 내용 중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당신은 기본소득을 수령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96%가 “원한다”, 4%가 “받지 않겠다”고 응답
 -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4%는 모두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자로, 이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되면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
 -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얼마만큼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적당한가”를 질문한 결과, 88%가 보기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제시되었던 2,500위안 이상을 선택
 - 만약 매월 2,400위안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2017년 톈진市 전체 주민의 1인당 평균 지배수입의 77.8%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월 2,500위안은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¹⁾
 - 2020년 톈진市の GRDP는 1조 4,083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는데, 중국 전체 도시 중 11위이긴 하지만 중국 4대 직할시 중 꼴찌를 기록. 최근 10년 동안 톈진市 경제성장률은 중국 4대 직할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임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기본소득 희망 액수가 톈진市 주민들의 불안한 경제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

1) 2020년 톈진市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2,050위안 수준임

- “기본소득을 받으면 평소 어떻게 쓰겠느냐”는 질문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하겠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을 즐기겠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 순으로 응답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기에 자신보다는 자녀나 가족, 연인 등을 위해 쓰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분석

새 국정과제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결합되어 기본소득 논의 진전 가능성

- 2021년 8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새로운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공동부유’는 모두 함께 잘살자는 의미로 전 국민에 대한 분배 강화에 초점을 둠
 - 주목할 점은 보고서 〈이념에서 실천까지: 기본소득 연구발전〉에서 기본소득의 사회적 가치를 “소득분배를 조절하여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명시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 당·정 지도부에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향후 ‘공동부유’와 결합되어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사회보장학회에서 발간하는 〈사회보장평론〉 2020년 제4호(10월)에 중국에서는 최초로 기본소득의 원가와 중국정부의 재정능력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
 - 중국사회보장학회는 중앙부처인 민정부(民政部)에서 주관하는 연구학회로, 〈사회보장평론〉에 실리는 모든 논문은 민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음
 - 이러한 일련의 기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치를 든 ‘공동부유’가 결코 갑작스럽게 등장한 국정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http://ciid.bnu.edu.cn>

<http://ciid.bnu.edu.cn/index/news/read/id/895.html>

<http://www.ciidbnu.org/news/202005/20200515152440706.html>

<https://baike.baidu.com/item/共同富裕/7790098>

현재 ‘최저생활보장제도’ 강화 시행…향후 ‘기본소득’ 고려 전망

중국 / 사회·복지

중국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기본소득제도를 다룬 논문에 따르면, 중국에는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복지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기본소득제도는 당분간 예산확보가 힘들어 단기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대신 중국 정부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 시행 중. 그럼에도 기본소득제도가 중국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동부유(共同富裕)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예산확보가 되면 기본소득제도 시행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분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의 연구기관인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소득분배연구원(中國收入分配研究院)의 완하이위안(萬海元) 부원장 외 2명은 중국의 행정부 격인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주관하는 학술지 <경제학 동태> 2020년 제1호에 ‘기본소득의 이론과 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중국도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복지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다고 주장
 - 중국은 1997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현(縣)급의 현(縣) 이상 도시와 현(縣) 정부가 있는 향(鄉)급의 진(鎮)¹⁾ 이상 농촌을 대상으로 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시작
 - 가족 구성원 1인당 평균소득이 거주지의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농업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부족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
 - 2003년부터는 향(鄉)급의 진(鎮)과 진(鎮)보다 하위의 향(鄉)을 포함한 농촌에 가족 구성원 1인당 평균소득이 호적지의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도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부족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
 - 중국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한계세율²⁾은 12%와 14% 사이인데, 중국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한계세율은 1% 또는 2% 정도
 - 이는 한계세율이 0%인 기본소득보다는 높지만, 기본소득에 가까운 아주 낮은 수치

1) 중국의 행정구역에는 크고 작은 순서로 성(省)급, 지(地)급, 현(縣)급, 향(鄉)급이 존재. 진(鎮)은 향(鄉)급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현(縣)급의 현(縣)을 관할

2) 초과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율

- 중국의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부분적인 음의 소득세³⁾. 음의 소득세는 노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유사
- 단, 소득을 조건으로 하고 개인이 아닌 가정을 단위로 하며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와 기본소득제도는 상이
- 2020년 7월에는 국무원 산하 사회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민정부(民政部)와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재정부(財政部)가 <어려운 군중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을 더 잘하는 업무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 이를 통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시작
 - 가족 구성원 1인당 평균소득이 해당 지역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높으나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5배보다 낮고 자산이 해당 지역의 최저생활보장 경계 가정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부족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
- 민정부 주관 학술지 <사회보장평론> 2020년 제4호에 <전 국민 기본소득의 원가와 중국정부의 재정능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
 - 이 논문은 중국 정부가 따르고 있는 원칙인 조세 중립성⁴⁾의 전제하에 예산을 마련해서 1) 기준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 빈곤선과 2) 기준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 빈곤선을 설정. 각각에 (1) 전 국민 지급, (2) 0세부터 14세, 15세부터 19세의 미성년은 각각 성년의 40%와 66.7%만 지급, (3) 20세부터 64세까지의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를 계산
 - 그 결과 1)의 (1), (2), (3)은 각각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8%, 6.07%, 4.72%를 차지하고, 2)의 (1), (2), (3)의 경우에는 각각 중국 국내총생산의 15.01%, 10.6%, 8.23%를 차지
 - 가장 적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1)의 (3)의 경우조차 중국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하고 경제성장과 세수를 감안해도 원가의 40.4% 밖에 확보할 수 없어 기본소득제도를 단기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향후 전망

- 기본소득제도가 중국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동부유(共同富裕: 최대한 성장하되 공평하게 분배)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제도 시행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

3)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4) 세금은 초과부담이 0이 되도록 즉,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조세간섭을 최소화

<http://www.jjxdt.org/Admin/UploadFile/Issue/k5dnys4d.pdf>

<http://www.mca.gov.cn/article/xw/tzgg/202007/20200700028866.shtml>

<http://www.caoss.org.cn/UploadFile/news/file/20210112/2021011214130503603.pdf>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7287430

정민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

‘부분 기본소득’ 지원 시범 프로그램 시행 발표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 사회·복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2021년 10월 신설된 ‘가정을 위한 지역투자부(Community Investment for Families Department, CIFD)’ 주관으로 도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소득 지원 시범 프로그램 ‘BIG LEAP’을 발표. 시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월 1,000달러를 1년간 지원

배경

-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소도시 차원의 기본소득 지원 실험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스톡턴시를 시작으로 점차 선택적 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도시가 늘어나는 추세임
 - 스톡턴시의 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 시행이 정신적 안정과 우울증 감소, 저소득층의 부채 상황 및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대도시 적용 사례도 생겨나고 있음
- 로스앤젤레스시 성인 노동자의 1/3 이상이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10가구 중 2가구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음. 이들 대부분은 유색인종이며, 빈곤에 처한 인구의 30% 이상은 아동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에 도시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정책을 고려

주요 내용

- 로스앤젤레스시는 도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소득 지원 시범 프로그램 ‘BIG LEAP’을 발표
 - 2021년 10월 신설된 ‘가정을 위한 지역투자부(Community Investment for Families Department, CIFD)’가 시범 프로그램을 주관
 - 시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약 4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는 개인, 혹은 임신 중인 여성 중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3,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월 1,000달러를 1년간 지원하게 됨

- 기본소득 지원은 조건 없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본소득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
- 시범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
 - 저소득층에 경제적 안도감을 제공
 - 즉각적인 현금지원으로 코로나19와 빈곤 문제에 처한 개인에게 경제적 지원
 -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관련 정책에 긍정적 영향 기대
 -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 저소득층에게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자산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
- 市는 200여 개 지역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 프로그램 홍보, 안내,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 커뮤니티 단위의 지역단체들과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지원 방법과 절차 등 관련 정보를 공유

정책의 한계

- 경제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번 기본소득 보장으로는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기본소득 수혜 가정이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지적

<https://www.lacity.org/highlights/community-investment-families-department-announces-bigleap-largest-guaranteed-basic>

<https://bigleap.lacity.org/>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저(低)연금자에게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기본연금법’ 시행

독일 / 사회·복지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연금수령액이 낮은 저연금자들이 최대 418유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기본연금법’을 도입. 이는 노령빈곤 문제 해결의 한 방편이자,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오랫동안 일한 국민에 대한 배려와 보상 성격을 지님

‘기본연금법’ 도입 배경

- 초고령사회 독일의 노령빈곤과 저(低)연금 문제
 - 독일은 2008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26%로 증가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칭함
 - 2017년 독일의 1인당 중간수입은 1,400유로, 이 중 60%는 840유로
 -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면, 수입이 840유로이면 ‘빈곤위험’, 40%인 560유로 이하는 ‘빈곤’
 -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의 정의에 따르면, 중간수입(세금과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순수입 상위 50%와 하위 50%가 만나는 중간지점. 평균수입과 다름)의 60% 이하인 경우 ‘빈곤위험’, 하위 40%는 ‘빈곤’으로 분류
 - ‘빈곤위험’에 처한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9년에 15.7%를 차지해 15년 전과 비교하면 4.7% 증가
 - 연금 수급 연령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2003년)에서 3.2%(2020년)로 증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가장 높음

‘기본연금법’의 주요 내용

- 취지
 - 연금수령액이 낮은 저연금자에게 연금급여액을 올려줘서 노령빈곤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임
 - 의무연금가입기간은 길지만 수령액이 낮은 가입자에 대한 배려와 보상 차원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의 효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

○ 시행 과정 및 절차

- 2020년 7월 기본연금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독일 전체 수혜자는 약 130만 명 정도
- 기본연금법에 따른 추가금액 수령 여부와 금액 산출은 연금공단에서 검토 후 통보
 - 2021년 7월에 대상자에게 첫 통보되었으며, 이 작업은 2022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
 -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작업이 늦더라도 2021년 1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될 예정
 - 연금 가입자의 검토 요청은 2023년 1월부터 가능
 -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가입자의 의무연금가입기간의 소득과 같은 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비율을 통해 측정하는 연금측정지수(소득이 평균치와 동일할 때 1)를 비롯하여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연금공단에서 계산
 - 최대 418유로까지 매월 추가 지급되며, 전체 평균은 월 75유로 수준
- 재원은 연금재정이 아닌 세금으로 확보
 - 연금요율은 20%를 넘지 않고 유지될 것이지만, 세금 인상이 예상됨

○ 자격 조건

- 의무연금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육아 기간, 병가 혹은 회복 기간을 포함하고,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 종사한 자영업자의 의무연금가입기간도 포함
 - 육아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까지 산정 가능
- 연금 납부 기간이 33년 이상 35년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규정에 따라 소액 보조 가능
- 의무연금가입기간의 소득이 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2021년 기준 3,462유로)의 30%에서 80% 사이여야 함. 소득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됨
- 연금수입 총액이 1,250유로 미만이어야 함. 부부는 1,950유로 미만이면 가능

‘기본연금법’ 도입 후 반응과 평가

- 기본연금법은 의무 연금 가입 상태에서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이 주 수혜대상으로, 노령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첫 시도로 환영받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음
- 기본연금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연금생활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수입이 전체 평균수입의 30% 미만인 경우가 제외되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생겨난 미니잡(Mini-job, 사회보험 감면제도로 연금 가입 의무 없음) 종사자, 특히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미니잡 종사자들이 최소 의무연금가입

기간이 부족해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사회보험 감면제도의 확대에 증가한 저연금자의 노령빈곤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85537/umfrage/armutsgefaehrungsquote-von-senioren-in-deutschland/#statisticContainer>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09/PD20_N062_634.html

<https://www.bmas.de/DE/Soziales/Rente-und-Altersvorsorge/Leistungen-Gesetzliche-Rentenversicherung/Grundrente/service-meldung-grundrente.html>

<https://dserver.bundestag.de/btd/19/184/1918473.pdf>

Mindestrente 2021 » Höhe Grundrente » Wer bekommt sie? (hermoney.de)

Altersarmut in Deutschland: Wem droht das? | myStipendium

Diakonie: Grundrente vereinfachen – Altersarmut von Frauen wirksam bekämpfen, Diakonie Deutschland, Pressemitteilung – lifePR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grundsicherung-senioren-101.html>

<https://www.hermoney.de/ihr-wissen/vorsorgen/altersvorsorge/grundrente-hoehe-mindestrente/#mindestrente>

<https://www.financescout24.de/wissen/ratgeber/altersarmut>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grundsicherung-senioren-101.html>

https://save-society.org/home/was-ist-altersarmut/?gclid=Cj0KCQiAtJeNBhCVARIsANJUJ2GUEChkxGdZucT4-Th99i5UG8myVgnBaFShAcf3JXZYr-QG2oRvXukaAs-pEALw_wcB

<https://www.ndr.de/nachrichten/schleswig-holstein/Grundrente-gegen-Altersarmut-Viele-im-Norden-gehen-leer-aus,grundrente154.html>

‘보편적 기본소득’ 관련 실험과 논쟁 지속

인도 / 사회·복지

인도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관련 실험과 논쟁이 공·사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많은 학자들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기존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에 지지를 표명. 반면 근로의욕 저하,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에 반대하거나, 특정 계층에 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진행

- 인도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통해 논의와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 2017년 1월 인도경제조사국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
 - 보편성: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성
 - 무조건성: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무조건성
 - 대리인: 시민이 기본소득을 독자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는 독립적 선택권자로서의 대리인 자격
 - 인도경제조사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가부장적이고 후견주의적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시민들을 해방시킨다고 언급

SEWA¹⁾의 시범 프로그램 시행

-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s)는 2009년 가장 미개발된 州에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효과를 시험
 -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은 사용처에 대한 제한 없이 매달 주민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
 - 저소득자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
 - 2011~2012년 18개월 동안 시행한 SEWA의 시범 프로그램
 - 12개월 동안 매월 성인 1인당 200루피, 어린이 1인당 100루피 지급
 - 12개월 후에는 6개월 동안 매월 각각 300루피와 150루피로 인상해 지급
 - 이 금액은 저소득 가정의 월 소득 20~30%를 차지
 - 은행 계좌가 없는 주민에게는 가정 방문으로 현금 지급

1)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s): 인도 전역의 자영업자, 저소득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여성의 생활수준 개선과 완전 고용을 달성하도록 돕는 기구

○ 시범 프로그램 시행 결과

- 2013년 5월 발표된 시범 프로그램 시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 생산성, 재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보여줌
 -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은 양질의 식료품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아의 낮은 영양실조 비율을 보여줌. 또한 어린이의 영양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짤 수 있도록 함
 - 현금을 수령한 마을 주민들은 질병 발생률이 낮고, 질병 치료와 약 복용을 지속적으로 함
 - 현금을 수령한 가정은 가축 사육이 늘고, 건강과 재정적 안정성을 개선
 - 현금을 수령한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 출석률이 높아짐
 - 현금을 수령한 마을은 교육 및 농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해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거나 농업 수확량이 증가
 - 현금을 수령한 가구는 새로운 사업이나 생산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음
 - 가계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으며, 현금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이 증가
 - 현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임.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은 여성과 부족 공동체에서 강하게 나타남
 - 현금을 수령한 마을 주민들의 술 소비량이 감소
-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압도적이나, 단기 프로젝트로 장기적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
 - 따라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행 가능성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와 실험이 필요

‘보편적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논쟁

-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결정된 바 없음
- 2016~2017년 인도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인도의 빈곤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 및 경제회복 방안으로 부상
 - 2016년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현에 대해 토론과 논쟁이 본격화됨
 - 이는 실업 현황과 현 복지 프로그램의 한계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서 출발
- ‘보편적 기본소득’ 찬성 의견
 - ‘보편적 기본소득’은 여성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고 성 평등을 강화하는 데 기여

- 수입원이 없는 여성들에게 자율성을 부여. 인도 여성들은 소득 부족으로 인해 학대와 폭력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
- 인도에서는 비공식 부문²⁾의 경제 활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공식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업이나 건강 문제 등과 관련해 재정적 안정을 제공
 -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므로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농촌 지역에서 대출 등 은행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이는 사채 등 비공식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농부들에게 긍정적
- ‘보편적 기본소득’ 반대 의견
 - 은행계좌 소유자인 남성의 마약, 도박, 술과 같은 지출에 대한 우려
 - 잉여소득으로 인한 직장 퇴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 기본소득 지급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으로 은행의 비용 증가
 -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
 -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존재
 - 사회보장제도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과 낭비적 지출 등을 조장할 수 있음
-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
 - 기본소득은 부자든 빈자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분배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포함해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음
 - 반면, 부유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가능성 있음
 -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공정한 데이터 수집이 중요
- 자원 조달 전략의 문제
 - ‘보편적 기본소득’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보편적 기본소득’을 구현하려면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종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발생

2) 인도 인구의 90%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함. 비공식 부문은 전체 경제 활동 중에서 정부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소득 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으며,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 부문을 말함

- 식량 보조금이나 공공유통시스템³⁾, 농촌 고용보장제도⁴⁾와 대형 국가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발생

○ 논의되고 있는 대안

- 전체 인구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함
 - ‘보편적 기본소득’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함임. 하지만 보편성이 불가침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예상
 - 옴트아웃(상위 25%에게 탈퇴 옵션을 제공)이나 장애인 등 사회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대안으로 모색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basic_income_in_India

<https://www.thehindu.com/opinion/op-ed/its-time-for-a-universal-basic-income-programme-in-india/article31717471.ece>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

3) 공공유통시스템은 빈곤층에 식료품 및 기타 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

4) 농촌 고용보장제도는 미숙련 육체노동을 하는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00일의 고용을 보장해 농촌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세계도시동향 제514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11월 29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